

갈림길에 선 한국농업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논리·무역자유화 외치는 경제관료·관변학자, 감당 어려운 또 다른 상대
'농업=생명' 돈과 바꿀 수 없어, 한국농업 지키는 유일방법 '국민 손'에 달려

한 국 농업의 근간인 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소비와 농정의 실패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엄청난 값싼 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으로써 날개를 달았고,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시장을 확실하게 지배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여기에 관세와 국내보조금의 상당 폭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WTO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은 한국 농업이 숨 고를 틈도 주지 않고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등 수출 선진국들은 관세 상한을 현행의 1/3에서 2/3 가까이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여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다.

사상최대 호황 속 타결 2008미농업법

최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미국 농민들

이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와중에 통과된 2008년 미농업법은 한국 농업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이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대공황을 겪던 1933년 이래로 미농업법(U.S. Farm Bill)을 통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행할 농업정책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6년 농업법을 통해 시장기능을 상당부분 도입했던 미국의 농업정책은 당시의 국제 곡물가격의 하락으로 2002년 농업법에서는 다시 농업을 보호하는 기조를 강화하였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더욱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2008년도 새 농업법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을 다시 제도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농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이러한 와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어 양국 국회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 FTA는 두 나라(bilateral) 또는 지역의 몇몇 국가(regional) 간의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지역주의 협정이다. 이는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하는 다자협정인 WTO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1995년 WTO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각 국가들은 FTA를 통해 무역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론적으로 FTA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수입수요를 창출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기존의 역외 수입을 역내 수입으로 전환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무역 전환효과는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여 WTO의 무차별원칙(Most Favored Nation Principle)과 배치된다. WTO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자유로운 무역시장을 만들기 위해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WTO 체제 하에서 FTA는 정리 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출범 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양자간 또는 지역별 FTA를 체결하였다. 이는 많은 수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WTO가 특정 국가들 간의 경제적 이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3년 예정으로 2002년에 시작한 WTO DDA 협상이 최근까지도 성과를 얻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FTA를 통한 무역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FTA도 갑작스레 등장하였다.

미국은 여러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여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WTO 보다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측면에서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FTA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식과 문화에 바탕을 둔 서비스산업과 농업은 미국이 가장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2차 산업은 중국에 양보하고 미국을 기술 및 시장 기반으로 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주력으로 우리 경제를 재편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가를 차치하고라도, 한미 FTA는 국내의 여러 산업들과 특히 농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위기의 한국농업과 내부의 적

한국 농업은 현재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 농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는 식량 문제를 시장논리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 관료와, 무역자유화만이 한국경제가 살길인데 농업이 발목 잡는다고 소리 높이는 관변학자들일 것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태계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그리고 균형 잡힌 지역개발과 조화로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된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먹고살기 어렵다고
 생명을 돈과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 농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다.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인 이들은 수시로 농업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분명 국제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간 무역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자유화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일본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도 확연한 경제 침체에 들고 있다. IMF를 겪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전체적인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이들은 침체에 들어선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소리 높인다. 그러나 WTO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책임한 구조조정과 부익부 빈익빈 외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녕 누구를 위한 무역자유화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무역자유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농업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의 대표 격인 미국이 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 부으며, WTO의 농산물 관련 분쟁에서 가장 많은 제소를 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왜 농산물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의 대표 격인 호주와 캐나다가 국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무역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마케팅보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와 미국 농업

이번 WTO 협상의 한국대표들은 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공로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그 비시장적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농업을 가진 미국이 농업에 엄청난 예산을 할애하는 이유는 미국농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현재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예산은 철폐한다면 많은 수의 미국 농가들은 소수의 기업농을 제외하고 대부분 파산할 것이다. 이는 농촌의 공동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농촌이 미국적 가치와 문화의 출발점이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은 농업과 농촌이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농업전망」에서 당시의 미 농무장관 덴 글리만은 다음의 5가지 원칙으로 농업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첫째, 농산물 가격보다는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정책 둘째, 특정 지역이나 작목 보다는 전국적이며 다양한 작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셋째,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소득안정화 정책 넷째, 자본이나 여타 생산수단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경지와 토질의 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다섯째, 농촌개발을 중시하는 농업정책이 그것이다. 글리만은 이러한 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미국 농업의 전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정책이 가격이나 정책 그 자체보다는 농민과

그들의 꿈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맺고 있다.

미농무장관의 농업관은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되어 있으며 가장 시장 지향적인 미국 농업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신념인 것이다. 농업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EU와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농업의 가치에 관한 정부의 완전한 이해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농업, 국민 지지 얻어야

아무리 미국의 공세가 강하더라도 온 국민이 농업을 지켜야겠다는 의지와 지지가 DDA 협상의 가장 강력한 협상력이 될 것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우리 농업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태계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그리고 균형 잡힌 지역개발과 조화로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된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먹고살기 어렵다고 생명을 돈과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1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가 200년 역사의 미국보다 농업사랑이 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 농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한국 농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농촌 생태계,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Y